

경찰 관련 주요 보도 [조간]

2023. 6. 8.(목)

□ 경남 기사

- ATM기 부취 현금 훔친 2명 구속 (경남일보)
 - 793만원 털어 유흥비로 탕진
- 동료가 심사위원장...진주보건소 설계 당선작 '공정성 논란' (경남신문)
 - 같은 학교 같은 학과 교수 심사해

홍 보 담 당 관 실

헬스장서 여성 강제 추행 혐의 30대 구속 기소

속보=검찰이 진주 한 헬스장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3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경남일보 4월 7일자 4면 보도)

7일 피해자 측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지난 1일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전 8시 25분께 러닝머신 운동을 하는 여성 뒤에서 신체접촉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여성 B측에 의하면 B씨는 러닝머신 운동을 하던 중 한 남성이 엉덩이 꼬리뼈를

찌르고 간 느낌이 들었다.

이에 B씨는 곧바로 A씨에게 항의했지만, A씨는 “스트레칭 중 실수로 부딪친 거 같다”며 해명하며 사과했다.

하지만 B씨는 찜찜한 생각이 들어 CCTV를 확인한 결과 무릎을 꿇고 자위행위를 하고 누워서도 음란행위를 하는 A씨의 모습을 확인했으며, 이후 헬스장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5월 말께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한 후 범죄 혐의점이 인정돼 검찰로 송치했다. 정웅교기자

< 참고기사 >



윤석열 퇴진 경남운동본부가 7일 경남도청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

“10년 같았던 1년, 더는 그렇게 못 산다”

윤석열 퇴진 경남운동본부 발족
시군 시국대회·민중총궐기 추진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에 분노한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퇴진 운동에 나선다.

‘윤석열 퇴진 경남운동본부’는 7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공언했다. 이병하 경남운동본부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정권이 했던 가장 나쁜 행동만 골라서 하고 있다”며 “이런 불행한 역사 속에 앞으로 4년을 더 살 것인지, 말 것인지를 우리가 결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지부 3지대장

의 분신이 퇴진 운동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노동계는 정권의 노동 탄압으로 노동자가 분신했다고 보고 퇴진 운동을 결의했다.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은 “정부는 민주노총을 폭력·간첩 집단으로 몰아붙이면서 사회적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다”며 “양회동 동지가 분신으로 맞서는 것을 보고 고민 끝에 윤석열 퇴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역 진보정당도 퇴진 운동에 동참했다.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은 “대통령은 국민 재산과 생명, 안전을 지켜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임무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며 “윤석열 퇴진 투쟁은 우리 국민 생존권과 한국 경제, 한반도 평

화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양미경 진보당 경남도당부위원장은 “지난달 윤석열 취임 1주년을 맞았는데 우리는 1년이 10년 같았다고 토로했다”며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없기에 국민과 함께 촛불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번 퇴진 운동에는 윤석열 심판 운동을 벌이던 205개 시민사회단체와 334명 개별 인사가 동참했다. 창원·김해·양산·진주·산청에 퇴진 운동 본부를 꾸렸으며 앞으로 다른 시군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윤석열 퇴진 경남운동본부는 오는 23일 ‘윤석열 퇴진 시군 동시다발 시국대회’에 이어 다음달 ‘윤석열 퇴진 경남 민중총궐기’를 준비하고 있다.

/김다솜 기자 all@idomin.com

< 정보과 통보 >

“주민과 협의 없는 김해고 이전 중단하라”

이전지 주민 40여 명 반대 집회
도교육청 “소통·해결 힘쓸 것”

경남도교육청, 김해시, 김해고등학교
교총동창회가 함께 추진하는 ‘김해고
주촌면 이전’에 주촌면 지역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앞으로 행정과
주민의 협의부터 풀려야 이전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김해 주촌 연지마을 주민 40여 명은
7일 오전 창원에 있는 경남교육청 앞
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평생 살아
온 내 집 마당 앞에 학교 이전이 웬 말
이냐’, ‘주민과 협의 없는 김해고 이전
즉각 중단하라’고 적힌 펼침막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현재 김해 활천로 24번길 29(삼정동
267-34)에 있는 김해고는 주촌면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13일 경남교육청, 김해시, 김해고
총동창회는 ‘김해고등학교 이전을 위
한 업무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오는
2028년 이전 개교가 목표다.

최근 김해시는 주촌면 천곡리 491-1



김해 주촌 연지마을 주민 40여 명이 7일 오전 창원에 있는 경남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주민과 협의 없는 김해고 이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동욱 기자

번지 일원 2만 4297㎡ 제2종 일반주거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지정안 열람·공고’를 올렸다. 열
람 기간은 이달 12일까지로 이 기간 의
견이 있으면 김해시 도시계획과로 제
출하면 된다. 시는 “김해고 이전 사업
에 따른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방지
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발
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제한지역이 되면 고
시일에서 3년 동안 주택사업계획 승
인, 건축허가·신고 등이 제한된다.

경남교육청은 주민들과 협의하기로
했다. 나민수 도교육청 학교지원과 고
등배치담당 주무관은 “김해시와 함께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 삶에 불편
을 준다면 서로 협의해 원만하게 해결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은 김해고를 포함한 지
역 중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이
전 동의와 재정투자심사 등 절차도 밟
아야 한다. 김해시와 김해고총동창회
는 학부모 동의 절차 등에 힘을 모으기
로 했다. /이동욱 기자 ldo32@ldamin.com

< 정보과 통보 >

ATM기 부쉬 현금 훔친 2명 구속

793만원 털어 유흥비로 탕진

함안경찰서는 편의점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파손해 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일 0시 20분께 함안군 군북면 한 편의점 밖에 설치된 ATM 기기를 파손한 뒤 그 안에 있던 793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밤 시간대를 노

려 ATM 기기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뒤 한 명이 망을 보는 사이 다른 한 명이 미리 준비한 도구로 ATM 기기를 부숴다.

경찰은 차를 타고 도주한 이들의 경로를 추적해 이날 오후 10시께 의령군 한 술집에서 A씨 등을 모두 붙잡았다. 이들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으며 유흥과 스포츠 도박 등에 돈을 모두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선동기자

< 형사와 통보 >



이흥희 거창군의회 의장 'NO EXIT' 캠페인

거창군의회 이흥희 의장이 지난 2일 마약범죄 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 의장은 “이번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마약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널리 알려 마약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용구기자

< 참고기사 >

경남도민일보

2023년 6월 8일 목요일 015면 사람들 마산중부경찰서 금은방 강·절도 범죄예방활동

마산중부경찰서가 최근 금은방 강·절도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관내 운영 업소에 대한 범죄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업주 대상 문자메시지 발송 등 1인 운영 영업소 수시 점검, 야간 지역 안전순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썬신 기자

< 참고기사 >

慶南日報

2023년 6월 8일 목요일 010면 사람



의령署,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점검

의령경찰서는 7일 신경범 서장을 비롯한 관계기관이 협업해 교통안전시설 점검 및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 서장은 의령군 부림면 부림초등학교 앞 현장 등을 찾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점검을 통해 표지판, 도로노면, 교통안전시설물 파손여부 등 각종 위험 요인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해 위험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요청했다.

박수상기자

< 참고기사 >

‘NO EXIT’ 마약에 탈출구는 없습니다 (마약 예방 릴레이 캠페인)

이상돈 양산부산대병원장

양산부산대병원 이상돈 병원장은 지난 2일 최근 마약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고 마약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약 예방 ‘NO EXIT’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 병원장은 “마약은 우리 모두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개인뿐 아니라 사회까지 미치는 해악이 클 수 있다”는 경각심을 한번 더 가졌으면 좋겠



다”고 말했다.

김석호 기자

< 참고기사 >

이동훈 거창세무서장

이동훈 거창세무서장은 7일 마약범죄 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서장은 “이번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불법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서장은 다음 참여자로 정순옥 거창소방서장을 지목했다. 김윤식 기자



< 참고기사 >

동료가 심사위원장... 진주보건소 설계 당선작 '공정성 논란'

진주시 보건소 신청사 건립 설계용역 공모 1등 당선작 출품자가 심사위원장과 같은 대학에 근무하는 겸임교수라 지침상 '기피 신청'해야 하지만 하지 않고, 심사위원장은 심사를 '회피'하지 않은데다 발주기관인 진주시는 제척사항을 알고도 심사에서 '배제'하지 않은 채로 당선작이 결정됐다는 주장이 업계에서 제기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7일 진주시와 건축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일 '진주시 보건소 신청사 건립사업' 건축설계 공모 당선작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A업체와 B업체는 공동으로 지난 2일 진행된 심사에서 당선작으로 선정돼 기본 및 실시설계

같은 학교 같은 학과 교수 심사해
업체 "기피신청 안해 지침 위반"
진주시, 문제 알고도 배제 안해"
시 "심사 당일 알려... 내부 검토"

계약권을 얻었다. 투표 결과지를 보면, A·B업체는 심사위원별 당선작 선정 투표 결과 2등작과 1표 차이로 당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말 공모를 시작해 지난달 말 설계 공모안을 제출받았다.

문제는 A업체와 공모에 공동으로 참

여한 B업체 대표 C씨가 겸임교수로 재직 중인 D대학 같은 학과에 심사위원장 E씨도 전임교수로 함께 근무하고 있어 공정성을 해쳤다는 주장이 나오는 대목이다.

본지가 확보한 진주시 보건소 설계 공모 '건축설계공모지침서'에 따르면, '본 용역의 심사위원, 기술위원 혹은 그가 속한 업체 및 직원 등은 참가할 수 없으며'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심사위원장 E씨가 D대학 건축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라, 같은 학교 같은 과 겸임교수 C씨가 대표로 있는 B업체가 공모에 참가할 경우 공정성을 해치는 데도 불구하고 사전 조치 없이 심사를

그대로 진행했고, A·B업체가 낸 공모안을 당선작으로 발표했다.

건축업계 관계자는 7일 "전임 교원(E씨)인 교수와 비전임 교원인 겸임교수(C씨)라는 차이는 있지만, 분명히 지침서를 위반한 것"이라며 "D대학 비전임 교원 임용 규정과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C씨는 학교의 교직원으로 해석된다. 심사위원장과 사전 의견 교환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주장했다.

건축업계는 B업체 대표 C씨는 물론이고 심사위원장인 E씨, 발주기관인 진주시의 대처도 위법·부당하다고 성토했고 있다.

설계 공모 지침서와 국토교통부 고

시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르면,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이 제척사항에 해당하거나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7일 전까지 근거 자료를 발주기관 등에 제출해 기피 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심사위원은 제척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스스로 심사에서 회피해야 한다. 또 발주기관은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설계공모 참가자의 공모안을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입상을 취소할 수 있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건축업계 관계자는 "B업체는 E씨가

같은 학교, 같은 학과의 동료 교수임을 인지했음에도 기피 신청을 하지 않았고, E씨는 회피하지 않았으며, 발주기관인 진주시는 공모인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심사위원을 심사에서 배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7일 "심사 당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들이 있는 가운데 B업체 대표 C씨가 겸임교수로 재직 중인 D대학 교수인 E씨가 심사위원장임을 알려 심사위원들이 검토해 처리한 것"이라며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 현재 내부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도영진 기자

< 참고기사 >

“사회적 약자 학대 가해자 신상 공개” 국민청원 1만명 돌파

진주 장애전문어린이집 학부모 청원
지난달 25일 게시 열흘 만에 20% 달성
24일까지 5만명 동의맨 소관위 회부

최근 진주의 한 장애아동 전문어린이 집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습 학대로 보육교사 2명이 구속되고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한 가운데, 피해 학부모들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학대 가해자와 기관에 대한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1만명 이상이 동의하는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지역 시민단체가 지난달 24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장애아동 학대 어린이집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경남신문DB/

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60일간 신체적 학대만 500여건, 경남 진주 장애전문어린이집 관련자들의 엄벌 및 신상 공개 제도 신설에 관한 청원’에 이날 오후 5시 기준 1만1541명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5일 올라온 해당 청원은 당일 100명의 찬성을 얻어 국회 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으며, 열흘 만인 지난 5일 20%를 달성했다. 이 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안인 이달 24일까지 5만명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는다.

해당 청원에서는 “지난해 6월 초부터 8월 16일까지 CCTV를 통해 확인된 방조 및 정서적 학대를 제외한 신체적 학대만 500건이 넘고, 가장 많은 학대를 당한 아이는 250건에 달하며 학대의 강도 또한 보는 사람이 충격적일

정도로 강하다”며 “장애인 및 아동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학대하는 사건은 검찰에 기소됨과 동시에 가해자들의 신상 공개 및 학대 기관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어린이집 교사 채용시 해당 교사의 인적성 및 과거 이력 등을 명확히 확인해 거르는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아 자격 정지 처분이 종료된 후 다른 기관, 다른 지역에서 취업해 또다시 제2, 제3의 피해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이 더 이상의 범주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예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진주시에 따르면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 1일부터 운영을 중단했으며 시에서는 이 어린이집 원생들을 다른 어린이집 등으로 전원 조치했다.

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과 원장·보육교사에게 각각 운영 정지 6개월과 자격정지 6개월 행정처분을 지난달 31일 통보했다. 어린이집 운영 정지 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로 했다.

경찰은 발달장애, 자폐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보육교사, 원장 등 관련자 8명(2명 구속)과 법인을 입건해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 참고기사 >

진주시보건소 설계용역, '동료교수 찬스' 안된다

진주시보건소 신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 당선작 선정에 논란이 일고 있다. 공모 1등 당선작 출품자가 심사위원장과 같은 대학에 근무하는 겸임교수여서 지침상 작품을 낼 수 없는데도 '기피신청'을 하지 않고 공모에 참여했고, 발주기관인 진주시는 출품자와 심사위원장이 같은 학교 동료 교수임을 알고도 심사에서 배제하지 않은 채 당선작이 결정됐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등의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보면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이 제척사항에 해당하거나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7일 전까지 근거자료를 발주기관 등에 제출해 기피신청을 해야 한다'고 돼 있다.

문제는 당선작 출품자와 심사위원장과 관계가 제척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진주시나 해당 심사위원회, 출품자 모두 문제의식이 없었다는 것이다. 공모 출품자가 겸임교수여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지 모르지만 분명 해당 대학의 비전임교원 임용 규정과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공모 출품자는 대학의 채용심사위원

회 심사, 면직과 징계 등의 엄격한 규정에 따라 임용된 학교의 교직원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대다수 겸임교수가 해당 대학의 겸임교수라는 사실을 명함에 새겨넣기도 한다. 특히 지역 건축업계에서는 공모 출품자가 사전에 심사위원장과 의견을 교환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도 제기하는 만큼 이번 문제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지금 우리는 광범위하게 활개 치는 '찬스 카드'에 분노하고 있다. 모 대학교수의 '부모 찬스'가 큰 물의를 일으킨 게 불과 얼마 전인데, 가장 공정하고 깨끗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자녀 특혜채용 혐의가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료교수 찬스' 의혹으로 번진 이번 진주시 보건소 설계용역 당선작 선정 문제는 사안이 크다는 것이다. 동료교수 찬스가 전국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광범위하게 뿌리내리지 않았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무엇보다 선의로 사용돼야 할 '찬스'가 타인에 피해를 주는 나쁜 사례가 되지 않도록 진주시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오늘도 낮엔 더워요

8일 부산 울산 경남은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경남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올라 당분간 덥겠다.

미세먼지 보통 초미세먼지 보통

2023년 6월 8일 (음 4월 20일) 기상안내 131



나들이	자외선	피부	냉방	빨래
90	60	60	60	60

맑음	맑은 후 구름많음	한때 비
구름조금	구름많은 후 맑음	천둥번개
구름많음	호리고 비	호리고 비눈
호림	소나기	호리고 눈

	해돋이/해질		달돋이/달짐
	05:09 19:36		23:47 09:02

물때

	밀물	썰물
부산	11:22 23:50	05:08 17:13
인천	07:45 20:00	01:26 14:16
포항	17:36 -	01:38 -
통영	11:43 -	05:48 17:40

바다날씨

앞바다	풍향	풍속 %	파고m
남해서부	남동-남	5-8	0.5~0.5
남해동부	남-남서	3-7	0.5~1
동해남부	남서-서	4-10	0.5~1.5
동해중부	남-남서	4-8	0.5~1
서해중부	남동-남	5-11	0.5~2
서해남부	남동-남	6-9	0.5~1

주간날씨

	9 (金)	10 (土)	11 (日)
부산	18-25	19-25	20-25
울산	17-27	18-27	19-27
진주	17-27	17-28	18-28
김해	18-27	19-27	19-27
창원	18-27	18-27	19-27
통영	18-24	19-26	19-25
대구	19-30	19-30	19-29
세종	19-29	19-27	19-28
서울	18-28	19-25	19-27
제주	19-27	20-27	20-26